

#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영소장

**정부는**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으며, 최근 몇 년 간 지원 대상과 금액은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되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차상위 이하 0~1세 영아에게만 지원 되던 양육수당이 2013년 현재는 모든 취학전 영유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많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정부의 지원 금액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아동의 발달과 상관없이 가정 양육이 중요한 영아까지 기관에서 보육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 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영유아 양육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생산된 자료들을 통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영유아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정기적 자료 수집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있거나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국책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일회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양육비용과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추정 및 대응 방안 연구’, ‘영유아 양육물가 현황 파악과 지수화 방안’, ‘표준



보육료 산출 연구’,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4가지 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부모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와 보육료,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향후 어떻게 관련 자료가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안을 하였다. 육아정책 연구소는 앞으로 비용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양육, 보육,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10년 간 유아교육 예산은 5백억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보육예산은 6천억에서 8조 3천억 원으로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예산이 증가된 만큼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용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양육비용 지원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이다.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워내어 미래에 1당 100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